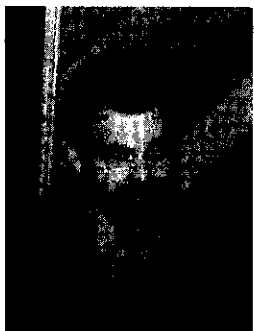


제임스 컷튼 교수와의 대담 : 1995년 북한의 정치·경제 전망

제임스 컷튼(James Cotton) / 호주 타스마니아 대학 정치학과 교수
최주섭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실장



제임스 컷튼

최주섭 먼저 북한의 내부분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경우, 북한의 정치체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일은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론에 기초하여 기존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회생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박사님께서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하여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정일체제 하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북한의 장래에 대해 장단기적으로 전망해 주십시오. 북한 정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러한 변화의 징표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특히 개방파와 보수파간의 갈등이랄까, 권력집단간의 정책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컷튼 북한과 같은 유형의 정치체제에서 발견되는 정치적 변화의 징후들은 대개 간접적인 것들입니다. 특정 인물의 등장 (혹은 비등장) 빈도, 특정 집회나 캠페인의 실시, 특정 슬로건의 채택, 그리고 정치적, 역사적 에피소드의 재평가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아직 김일성이 남긴 자리(즉, 국가주석직과 당 총비서직)에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소장파 군장성들의 대두, 그리고 심지어는 단군릉의 복구까지도 모두 직접적인 정치적 의미를

“김용순으로 대표되는 개혁파와 황장엽 등 강경파와의 대립은 물론이고 군부 내에서도 파벌간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벌어진 경제 개방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이미 개혁파들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북한 군부내에서 약간의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듯하며, 김일성 충성자들도 권력 이양가를 맞아 서로 남보다 앞서려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김일성의 공식 지위들이 채워지고 (이는 새로운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어야 가능할 것임), 또 그 밖에 공식으로 있는 당과 정부내 몇몇 자리들 (인민무력부장과 당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채워질 때 비로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1996년이 지나도록 이들 공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끝없는 권력다툼에 처해 있음이 분명해 질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그 지도부 또한 김일성의 친족에 의해 거의 독차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독립 국가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지 않는 한, 이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급격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이후 체제는 그 이전 체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창건자의 입장에서 김일성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었으며, 그의 지지만 있으면 그 누구도 권력의 지도부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책이나 슬로건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이것은 김일성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좋은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여유 혹은 유연성이 김일성 후계체제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과 인사는 반드시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연속성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김정일이나 그와 비슷한 인물이 권력의 정상에 위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 이양의 결과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김정일을 포함하는 집단지도체제이며, 현재 이러한 결과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듯합니다.

북한과 같은 유형의 정치체제는 정책에 대한 이견을 평가·논의하거나 새로운 지도자를 충원·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북한은 미지의 세계에 잠겨 있는 상태로서, 정책이나 권력을 둘러싼 이견이나 갈등이 언제든지 수면으로 떠올 수 있습니다. 김용순으로 대표되는 개혁파와 황장엽 등 강경파와의 대립은 물론이고 군부 내에서도 파벌간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벌어진 경제 개방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이미 개혁파



최주섭

들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 북한내 다양한 이익들은 경제 개방에 의해 창출된 기회를 활용하는 데 서로 경쟁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최주섭 북한은 현재 체제의 생존을 위협당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회생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침체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북한은 중국식 개방모델을 원용하여,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중국식 개방과 북한식 개방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연 북한식 개방은 성공할 것인지, 장단기적으로 전망해 주시고, 북한식 개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개방이 북한체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으로 보십니까? 특히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일 뿐, 실질적으로는 남북경협에 관심이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북한은 체제수호를 위해 경협에의 대상으로서 한국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인데, 박사님께서 남북경협에 임하는 북한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킷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몇가지 요인의 결과입니다. 스탈린식 통제경제의 경직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대개 초기 단계에서는 성과를 보이지만, 곧 성장 둔화와 비효율성 증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경제체제는 특히 경공업이나 소비자 산업 분야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며, 정보화 시대가 요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문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가능하면 자신의 자원과 기술로서 생산하겠다는 북한의 고집스러움은 추가적인 비효율성을 가져 왔습니다. 북한경제의 군사적 부담은 막중하여, 공장, 기술, 노동 등 생산요인들은 군사적 목적에 묶여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사 우선의 사고 방식은 국가 경제를 다른 여러 형태로 왜곡시켜, 그 한 예로 생산 시설과 발전소를 지하에 위치하도록 하는 일은 막대한 비용의 낭비를

“1991년 12월 두만강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립으로, 북한은 경제개혁에 대한 자신의 실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개방전략의 법률적 틀은 중국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었으며, 중국의 경험은 북한의 개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과는 별도로, 북한은 1990년부터 자신의 무역전략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그 때까지는 북한 대외무역의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신용 및 특수 거래였으며, 그 중의 절반은 구소련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그리고 앞으로는 교환가능한 화폐로 거래를 하자는 러시아와 중국의 요구로 인해 러시아와의 무역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점점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는 멈추었으며, 북한은 여러 상품과 군사 물자 등의 구입을 위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1991년 12월 두만강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립으로, 북한은 경제개혁에 대한 자신의 실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개방전략의 법률적 틀은 중국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었으며, 중국의 경험은 북한의 개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빌려 온 법률 중에는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것도 있는데, 이는 외국 기업인들에게 중국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진-선봉 지역의 지리적 위치는, 물론 러시아 및 중국과의 연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하지만, 북한 대부분의 영토와 인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타 지역들의 개방에 대해서는 별 진척이 없었으며, 단지 남포와 신의주 지역을 경제지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을 뿐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지역까지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한다면, 이는 중국의 관행에 보다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자신의 개발지역에 대한 해외 중국동포들의 광범위한 투자에서 많은 이익을 보았습니다. 중국 모델의 이러한 측면을 모방하려면, 북한으로서는 남한 기업과의 공동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그 성과면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2~3년 후에 가서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개혁을 발전적으로 계속 추구한다면, 북한의 인민들이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지리적 위치가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도모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현재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있는 북한 '원'과 다른 화폐와의 환율이 보다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2.2 원 대 1 달러의 환율은 약 50 원 대 1 달러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외국 기업가들에게는 북한 노동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자유를 더 확대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 내에서의 사유 재산권이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의 법률 체계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집단이나 국가만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헌법 20조에 반하면서까지) 그러한 권리를 보호할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 줌으로써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대외부채 문제의 해결과 자국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발전들은 모두 정치적, 그리고 국제적 변수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의지는 물론이지만, 안정적인 국제적 혹은 지역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핵문제의 타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어느 정도 시장경제 요소들을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경우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의 투입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반항을 가지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북한 정권이 개혁의 역동성을 이해한다면, 국제경제와의 연계를 중재하는 '수문장'(gate keeper)이나 '지대추구자'(rent seeker)로서 행동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78년 이후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예로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의 위세를 들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차이점은 북한의 개방은 남한으로부터 삶의 방식과 문화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유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요소들이 북한 체제의 독립성을 잠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차이점은 북한의 개방은 남한으로부터 삶의 방식과 문화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유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요소들이 북한 체제의 독립성을 잠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 분명치 않은 것은 과연 김정일 지도부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중국의 길을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지도부는 아직도 자신들이 고립과 대결 정책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은 군사적 부담을 지탱 못하는 경제의 파탄이나 혹은 폭동 발생의 지경까지 도달한 인민들의 경제적 궁핍을 초래, 결국은 체제의 붕괴를 가져 올 것입니다.

최주섭 현재 남북한의 관계를 보면, 경제적으로는 제한적으로나마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경수로 문제에 대한 양측의 극명한 입장 차이에서도 보이듯 여전히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업차원의 경험은 수용하면서도, 정부 당국 차원의 경험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조문문제와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하여, 당국간 대화마저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오래 갈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사남께서는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기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현재의 남북한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유효하리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컷튼 남한과 대화한다는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남한에 대하여 말해 왔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 정부가 주권을 가진 민족적 협력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995년 들어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핵 문제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남한과 미국을 떼어 놓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김정일의 불확실성과 자신감의 부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민들을 상대로 말하는 것도 어려워 한다면, 그로서 남한 정부 인사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남한 정부와 그 어떤 내용의 협상을 성사시킨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공동이익을 찾거나 또는 접촉을 위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한 기업의 북한 경제 참여를 허가한다면, 그 허가는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할지라도, 김정일은 그 협상의 세부 내용에 반대하는 북한내 군부, 관료, 혹은 당의 여러 파벌로부터의 비난을 모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공동이익을 찾거나 또는 접촉을 위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김일성의 사망 당시 남한 정부는 적어도 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켰던 김일성이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외 다른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 기업의 북한 경제 참여를 허가한다면, 그 허가는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한은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운동이나 행사를 통해 통합된 한국관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통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통일의 속도를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중국의 길을 따른다면, 장래 통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주섭 북미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에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절대 고수를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과 한국형 절대불가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 사이에서, 미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 미국, 일본 등 주요 관련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사님께서서는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울러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특히 한국표준형 경수로가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킷튼 경수로 문제는 난제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핵위기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과 북한의 NPT체제 잔류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만약 그 대안으로서 경수로에 예를 들어 ‘웨스팅하우스’라는 명칭을 붙이고 사업의 일부분을 남한의 타국기업에게 맡긴다면, 경수로 건설은 성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보는 남한의 장기적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NPT 연장 전망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남한은 적을 돕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핵위기의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경수로 지원은 통일 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수로 모델일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할 생각입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의 핵확산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우호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수로가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와 미국과의 거래 성공이 의미하게 될 국제 지위의 향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남한의 접근방법이나 정책이 경수로 건설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만약 그 대안으로서 경수로에 예를 들어 ‘웨스팅하우스’라는 명칭을 붙이고 사업의 일부분을 남한의 타국기업에게 맡긴다면, 경수로 건설은 성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보는 남한의 장기적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경수로 문제의 해결,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러는 더 큰 문제의 해결은 바로 김정일의 이해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년 간에 걸친 북한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정일이 이룬 업적은 그리 대단치 않습니다. 적어도 자국 인민들이 보기에는 전통적 적어있던 미국과의 우위적 입장에서 화해를 이루어 낸다는 것은 김정일의 북한내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는 또한 김일성이 카터 전(前)대통령과 만나면서 시작되었던 화해의 과정에 마무리를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주심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한국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노동당과 조기 수교교섭 재개 촉구에 합의함으로써, 조만간 북한과 일본 사이에 정부 차원의 수교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경수로문제와 관계없이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수로문제와 관련하여 미묘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일간 수교 교섭 재개 움직임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수로공급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북일 국교정상화에는 많은 난제가 가로놓여 있는데, 이들 문제를 포함하여 북일 수교 교섭은 어떻게

“북한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북한 정부에게 그러한 인식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시며,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킵튼 일본은 이미 경수로 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일협상과정에서 이러한 견해를 재표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일간 대화는 과거에도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양측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대화도 쉽게 끝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북미간의 핵합의가 흔들린다면, 일본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막강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분명하고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국 북한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겠지만, 이는 전체적 지역 환경이 향상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정부간의 수교가 의미하는 바는 양국 정부 모두 제각기 자신의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또한 자신들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상호간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분명 일본과의 수교를 일종의 외교적 승리로 표현하겠지만, 실제로 이는 단지 현 상황(status quo)의 인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북한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북한 정부에게 그러한 인식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최주심 한러관계 및 한중관계가 개선된 데 이어, 머지 않은 장래에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개선된다면, 한반도 주변정세는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 관계는 아직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화해협력의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승인구도와 비슷한 이러한 변화들은 한반도 통일환경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바, 박사님께서서는 2000년대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며, 특히 변화된 환경속에서 한민족의 숙원사업인 통일을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정전협정의 대체 문제에 대한 협상은 남북한 교차승인이 완결되고, 핵위기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한 관계에 진전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대체 문제를 논의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컷튼 남북한 교차 승인은 남한측에서 오랫동안 추구해 오던 목표입니다. 이는 주권국가로서의 남한의 존재에 대한 북한측의 인정을 의미하며, 또한 북한으로서 미국과 일본 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 국가들 스스로가 지역안보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를 접어 들며, 동북아내 지역기구들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남한으로서는 북한을 APEC, 그리고 이미 북한이 가입 의사를 시사한 바 있는 ASEAN 지역포럼 등과 같은 지역기구에 끌어 들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잦은 접촉을 통한 남북 양측간 연계성과 친근감의 증대는 통일의 선결조건입니다. 또한 남한 정부는 새로운 국제 환경을 활용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최주섭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문제가 중요한 현안문제로 곧 부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한국은 남북 당사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서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성과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컷튼 정전협정의 대체 문제에 대한 협상은 남북한 교차승인이 완결되고, 핵위기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한 관계에 진전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대체 문제를 논의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폴란드를 강제 축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에는 당연히 남한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클린턴 정부가 국내의 비판세력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성급히 타결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안보환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달성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는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것도 있으며, 정부정책에 의해 단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기구의 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연계성 확대와 인구의 이동 증가는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냉전 후에 들어선 각종 국제 레짐들 (즉 인권 레짐, 핵무기 레짐, 화학무기 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관련 합의들)은 모두 국제 사회의 안정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은 주변에서의 상황 전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남한 정부가 이러한 상황 전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은 지역체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변칙적인 태도입니다. 비록 중국이 지역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받아들여주는 했으나, 이는 현정권의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개방은 현정권의 입지를 여러 측면에서 약화시켰습니다. 국가 경제 분야의 규모 및 힘의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 재원의 감소와 국가에 의해 직접 통제 받는 인구 비율의 감소로부터 경제 주요부문의 해외무역에의 의존도 증가에 이르기까지 그 예는 다양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권력 약화의 추세를 바꾸려고 시도할지 모르며, 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은 부분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점차적으로 세련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련화를 위하여 여러 방법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며, 남한 정부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 레짐의 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또는 이 지역의 공통적 문화 유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주섭 끝으로 정치외교적 측면, 무역 등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등에서 호주와 북한의 관계는 어떠하며, 앞으로 양국간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컷론 호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호주 간의 관계는 현재 일시

“수차례에 걸쳐,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작년 방콕에서의 호주 관료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은 양국간 관계를 재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호주 정부의 입장은 관계 재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전에 먼저 몇가지 현안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지 상태입니다. 1975년 5개월 동안 호주 캔버라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던 북한은 급작스럽게 아무런 설명 없이 직원들을 불러 들였으며, 평양의 호주 공관 직원들도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작년 방콕에서의 호주 관료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은 양국간 관계를 재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호주 정부의 입장은 관계 재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전에 먼저 몇가지 현안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는 북한이 NPT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관계 개선에 앞서 핵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과의 오랜 기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 정부는 남북한 화해에 있어서의 진전이 북한-호주간 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리라는 점을 북한측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1970년대 호주와 뉴질랜드 은행이 주관했던 컨소시움에 대해 발생한 부채를 아직도 갚지 않고 있으며, 이 부채에 대한 만족할 만한 상황 스케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외교관원들이 1975년과 같은 급작스런 부당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별도의 보장 수단이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외교 관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북한-호주간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채 문제가 많은 잠재적 기업인들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주의 대북 수출품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알루미늄인데, 이것은 북한의 나진항을 경유하여 러시아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문화적 관계는 미미한 수준이며, 단지 지난 수년간 소수의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 오곤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은 호주에서 상당한 언론 보도를 받고 있는 핵문제에 거의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만약 현재의 전망대로 북한에 미국 공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호주도 미국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호주가 남한과 오랜 동안 지속해 온 우호관계, 그리고 갈수록 더 긴밀해 져만 가는 경제적 유대관계를 평가절하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은 언급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